



2023고합927 판결선고

2024.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27

위증교사, 위증

◆ 선고기일 : 2024. 11. 25.(월) 14:00 서관 311호 법정

◆ 선고요지

[피고인 1. 이재명]

○ 무죄

[피고인 2. 김진성]

○ 일부 유죄 : 벌금 500만 원

▣ 제1, 4, 5, 6증언 부분¹⁾

○ 일부 무죄

▣ 제2, 3증언 부분(포괄일죄이므로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부분에 제1 내지 6증언의 각 내용을 기재함.



◆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이재명 부분 (위증교 사)	<p>▷ 전제사실</p> <p>- 피고인 이재명은 2002년 KBS의 PD 최○○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사건(이하 ‘검사사칭 사건’ 이라고 함)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2018. 5. 29. 경 있던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라는 취지로 발언(이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이라고 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음.</p>	무죄
	<p>▷ 구체적 범죄사실</p> <p>- 피고인 이재명은 검사사칭 사건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과 KBS 사이에 최○○ 등이 피고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주면 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협의를 부인하였고, 김병량의 수행비서였던 피고인 김진성을 증인으로 내세워 피고인 김진성으로 하여금 김병량과 KBS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던 증언하게 하여 검사사칭 사건은 피고인 이재명이 김병량 측으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이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토론회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로 마음먹었음.</p> <p>- 이에 피고인 이재명은 2018. 12. 22.경 및 24.경 피고인 김진성에게 전화를 하여, 김병량과 KBS 사이에 피고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김진성이 이를 모른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김진성이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하여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함.</p>	



재판부 설명자료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p>- 피고인 김진성은 그 무렵 피고인 이재명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본인의 기억이 아닌 피고인 이재명과 통화하면서 들었던 내용과 피고인 이재명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변론요지서 내용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변호사 신○○)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전송받아 질문 내용을 숙지하였음.</p>	
김진성 부분 (위증)	<p>▷ <u>아래 각 증언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함</u></p>	
	<p>▷ <u>제1증언</u></p> <p>- 피고인은 이재명 측 변호인의 “그러던 중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p>	유죄
	<p>▷ <u>제2증언</u></p> <p>- 피고인은 이재명 측 변호인의 “이러한 상황에서 김병량의 선거캠프 내에서는 ‘KBS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피고인(이재명)을 공무원자격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하여야 한다, 강하게 가자.’ 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지요.” 라는 질문에,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라고 증언</p>	이유무죄
	<p>▷ <u>제3증언</u></p> <p>- 피고인은 이재명 측 변호인의 “이후 김병량은 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p>	이유무죄
	<p>▷ <u>제4증언</u></p> <p>- 피고인은 이재명 측 변호인의 “당시 김병량이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 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p>	유죄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p>▷ 제5증언</p> <p>-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이 알기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최○○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 는 협의가 최○○와 피고인(이재명)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김병량이 두 사람을 고소한 시점, 최○○가 구속된 시점, 그리고 피고인(이재명)이 구속된 시점을 구분한다면, 어느 시점에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협의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협의를 피고인(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재차 “그렇다면 최○○의 구속 후 피고인(이재명)의 구속 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라고 질문하자 “예.” 라고 증언</p>	유죄
	<p>▷ 제6증언</p> <p>-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 이라는 것을 김병량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무엇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선거 전에 KBS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최○○나 피고인(이재명)에 대한 고소취하의 협의였나요, 아니면 KBS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였나요” 라고 질문하자 “KBS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습니다” 라고 증언</p>	유죄



◆ 판단의 요지

□ 피고인 이재명의 검찰청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검찰청법은 이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그런데 검찰청법 개정 이후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위증죄, 무고죄 등을 포함한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상위 법률인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수사개시는 위법함.

○ 판단

-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검찰청법의 개정 과정을 보더라도, 국회에서는 기존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이라는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개정되었는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가 아닌 이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중요범죄가 대통령령에 추가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에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이재명 및 변호인의 주장

- ① 피고인 김진성은 위증을 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으며, ③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고의도 없었음.

□ 피고인 김진성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피고인 김진성이 위증을 하였는지 여부)²⁾

○ 제2증언 : 무죄

- 피고인 김진성은 이 법정에서 “검사사칭 사건 당시 선거팀에서도 피고인 이재명이 부정한 의도를 갖고 조작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도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이재명은 김병량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고 퇴진운동까지 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이재명이 타겟이 되었던 것도 맞다.”, “협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음.
- 피고인 김진성은 2018. 12. 22.경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 증언과 같은 ‘분위기’와 관련한 피고인 김진성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과 일치한 증언으로 판단됨.

○ 제3증언: 무죄

2) 피고인 김진성은 제1 내지 6증언은 모두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증 범행임을 자백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는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고, 피고인 김진성과 관련하여서도 위증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법리적인 판단 및 자백의 신빙성과 관련된 판단은 피고인 김진성의 자백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함.



- 최○○는 검사사칭 사건의 재판 및 이 법정에서 ‘김병량으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병량은 검사사칭 사건에서 최○○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 부분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는 반하는 증언임.
- 그러나 이 부분 증언은 증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이 아니라 ‘고소취소’라는 객관적·일반적 사실에 관한 증언으로,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곧바로 위증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김진성이 2018. 12. 24.경 피고인 이재명과의 통화 후 김병량 선거캠프의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최○○에 대한 고소취소가 언제 있었는지를 묻고, 신○○과 통화하면서도 ‘KBS에 대한 고소취하는 지방선거 전이 아니었겠냐 판단된다’고 먼저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진성은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김병량이 실제로 최○○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인식하여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 김진성의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제1, 4, 5, 6증언 : 유죄

- 피고인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증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언들은 피고인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함.

□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하였는지 여부)

- 2018. 12. 22.경 및 2018. 12. 24.경의 각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위 각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최종적으로 요청한 증언은, ①「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다」는 내용, ②「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 ③「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서로의 협의」등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과, ④「당시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나 ⑤「당시의 상황」에 대한 내용에 관한 증언, ⑥「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재명을 걸어 놓아야 될 입장이었다」는 내용에 관하여 증언임(피고인 이재명은 피고인 김진성에게, 김병량과 KBS 사이의 피고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고소취소 약속을 아는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피고인 김진성이 이를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의 협의·상의·접촉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음).
- 위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아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였던 피고인 이재명이 김병량의 핵심측근으로서 검사사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한 피고인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피고인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피고인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하여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인 이재명은, 피고인 김진성이 알지 못한다고 한 ‘고소취소 약속’과 피고인 김진성이 모를 수 있는 내용인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의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음. 피고인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피고



인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피고인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임.

○ 피고인 김진성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신○○과 통화·면담을 한 후에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김진성의 진술서 작성 및 신○○과의 통화, 면담, 증인신문사항의 작성에 피고인 이재명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 김진성은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고, 신○○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파악하거나 지득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을 작성하고, 신○○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은 피고인 김진성이 언급한 바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

○ 피고인 김진성의 제1 내지 6증언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제2, 3증언의 경우

위 증언들은 피고인 김진성의 기억에 따른 증언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각 증언이 위증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음.

- 제1, 4, 5, 6증언의 경우

위 증언들은 위증에 해당하고, 피고인 김진성은 피고인 이재명의 위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요청은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행위는 위 각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이재명과 피고인 김진성 사이의 위 각 통화 당시(교사행위 당시)에는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행위 당시 피고인 이재명은 피고인 김진성이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이재명에게 피고인 김진성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나아가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재명이 위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피고인 김진성으로 하여금 이 부분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함.

◆ 피고인 김진성에 대한 양형의 이유

- 피고인 김진성은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 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하여 마치 김병량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피고인 김진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재판부 설명자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김진성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